

최근 취업난의 특징과 전망

2008.5.22 | 이상동_새사연 연구원 | sdlee@cins.or.kr

목 차

1. 유례 없는 취업난에 돌입하나
2. GDP 성장해도 고용은 하락
3. 고용대책 접근 방식의 전환 필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http://saesayon.org>

요 약

‘경기보다 고용이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최근의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이런 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들어 신규고용은 20만 명 이하로 떨어져 늘어나는 취업 인구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편, 2008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5.7퍼센트나 상승해 2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래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는 지난 해 11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취업자증가율(전년동월비)은 이보다 5개월이나 빠른 6월부터 떨어진 것도 이런 진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GDP 성장에 대한 고용탄력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놓인 가운데, 단기적인 변동이 GDP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전례없는 상황도 관측되고 있다. 경기 상승기에는 고용이 늘어나지 않다가, 경기 하강기에는 고용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이 구조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의 징표이며, 채용에는 인색하고 해고에는 발빠른 ‘고용 유연화’의 결과이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고용 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곧 체감하게 될 세계경제 침체와 경기하강 국면에서 고용개선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성장 경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 높아지는 가운데, 만약 저고용 구조마저 고착화된다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피해해질 것이다.

1. 유례 없는 취업난에 돌입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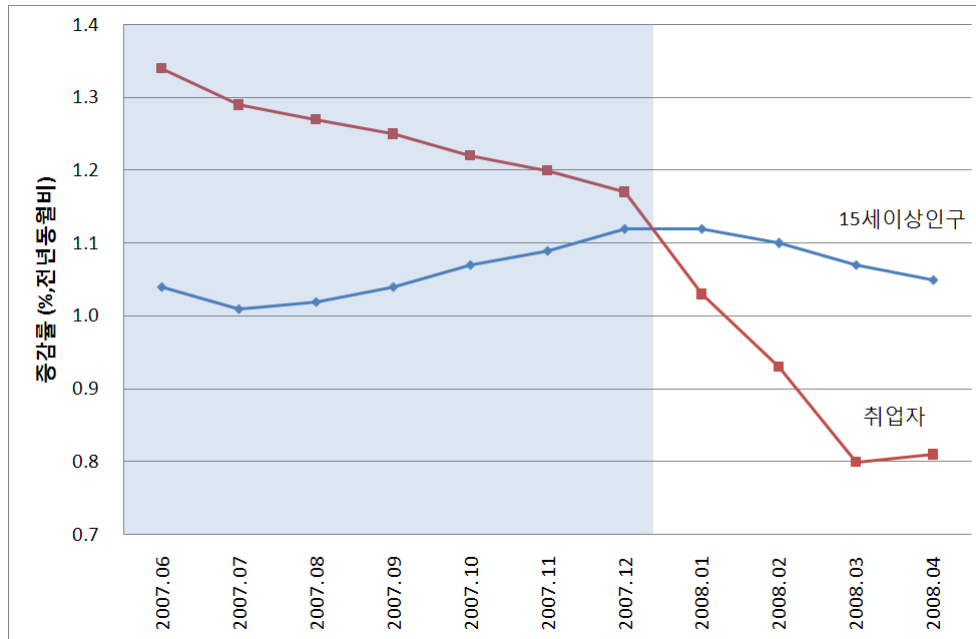
■ 2008년 들어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

- 2008년 들어서면서부터 신규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음.
- 지난 3월에는 신규취업자 수가 18만 4000명을 기록해 설마했던 20만 명 이하로 떨어져 3년 1개월 만의 최악.
- 취업 시즌을 맞이한 4월의 고용사정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신규 취업자는 19만 1000명으로 20만 명 선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3월과 유사한 고용창출력을 보임.

■ 취업증가율, 인구증가율에 크게 못 미쳐

- 2008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용 악화는 한국경제에서도 유례가 없는 현상임. 왜냐하면, 취업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임.
- 올해 4월을 기준으로, 15세이상 인구는 1.08퍼센트(41만 명) 증가했으나, 취업자는 0.81퍼센트(19만 명) 증가에 그침. 결국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의 비율)은 하락에 돌입.
- 이런 역전 현상은 1998년과 2003년에도 있었으나, 당시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이라는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효과였음.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취업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며 장기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그림 1] 인구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업자증가율



주: 원계열, 전년동월대비

출처: 통계청

2. GDP 성장해도 고용은 하락

■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8분기만의 최고

- 올해 1분기 들어 고용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우수한 수치를 기록하였음. 2008년 1/4분기의 실질GDP는 전년 동기 대비 5.7퍼센트 성장해서 8분기만의 최고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되었음. 즉, 2006년과 2007년의 GDP 성장률을 상회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분기의 신규고용은 약 20만 명(월단위 평균)에 불과해 지난 두 해의 신규 고용 약 30만 명보다 떨어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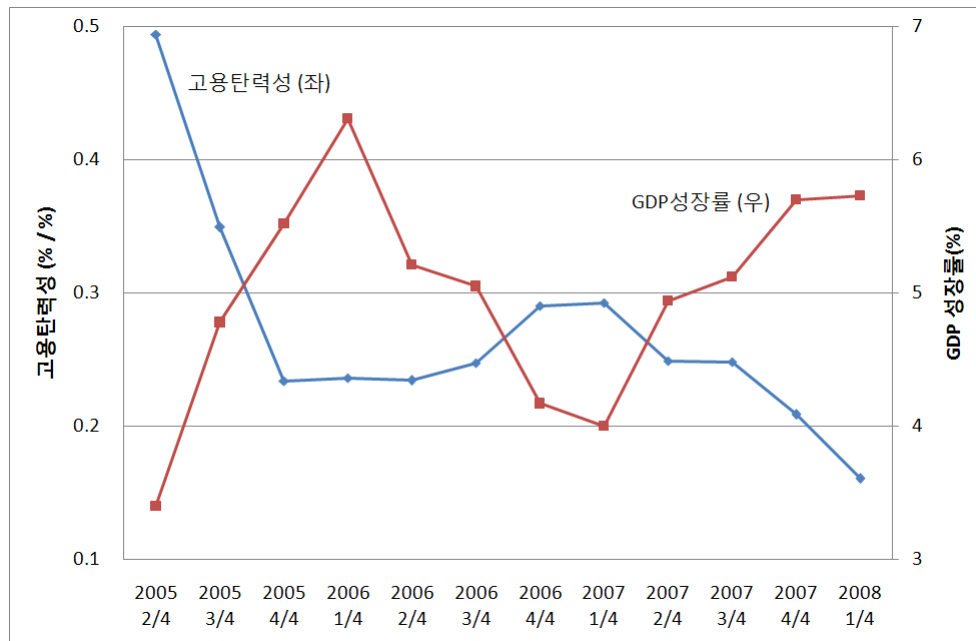
- 이른바 ‘더 많은 성장이 더 많은 고용을 만들어낸다’는 믿음은 적어도 올해 1분기와 최근 2년과의 비교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GDP 성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고용 창출력

- 고용 창출력이 감소해도 GDP 성장률은 높아지는 현상, 즉 GDP 성장이

고용을 이끌지 못하는 현상은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의 고용탄력성 변화를 보면, GDP 성장률과 무관하거나 심지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여기서 고용탄력성이란 GDP 1퍼센트 성장에 해당하는 취업자증가율을 나타내며, 국가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됨.

[그림 2] 따로 노는 GDP 성장률과 고용



주 1) 고용탄력성: GDP가 1% 성장에 대한 취업자증가율. 취업자증가율 ÷ GDP 성장률로 측정

2) GDP 성장률: 전년 동 분기대비 실질GDP 증가율

출처: 통계청, 한국은행

■ 신규고용 규모의 하락이 원인

- 고용탄력성은 취업자증가율을 GDP 성장률로 나눈 것이므로, 분모인 GDP 성장률이 증가하면 산술적으로는 그 값이 낮아지게 됨. 자본주의 선진국의 고용탄력성이 추세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이 때문임. 그러나 한국경제는 GDP 성장률이 높으면 취업자증가율이 덩달아 높았기 때문에 고용탄력성은 1980년대 이후 2000년대 초까지 큰 차이가 없었음.

- IMF 사태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가 끝나자, 지난 시기의 “성장-고용”의 동조화가 약해진 것으로 평가됨. 최근 3년 고용탄력성이 감소한 것은

GDP 성장보다 취업자증가율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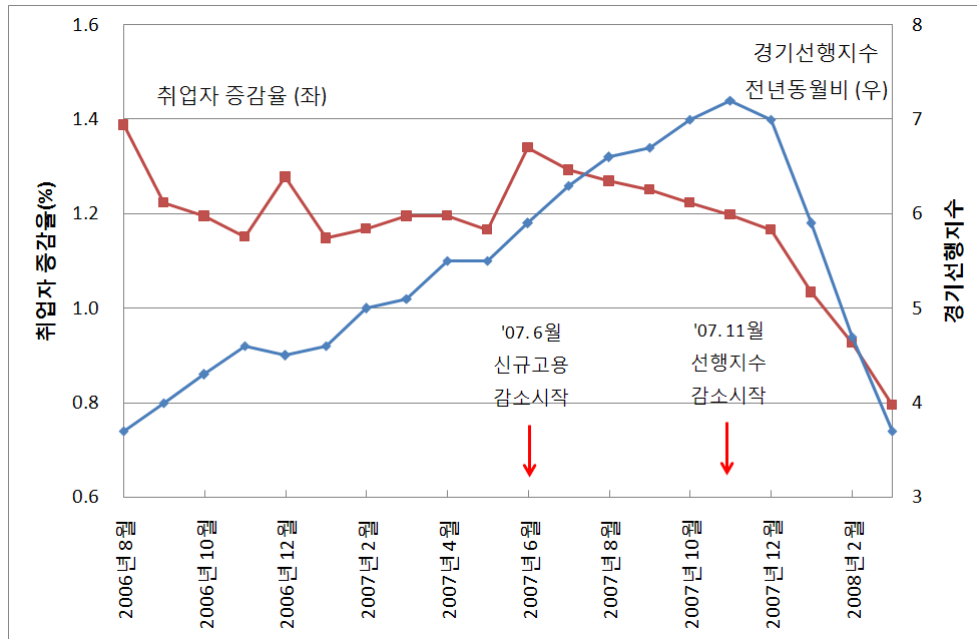
- 한편, 취업자증가율이 감소하는 데도 실업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음. 늘어난 인구 41만 명(4월 기준, 15세이상인구) 중에서 22만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는데, 이들은 실업자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 (실업자는 3만 2000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로 새로이 편입되었음.
- 그렇다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집단은? 총 8만 3000 명이 늘어난 취업준비자들이었음. 취업준비자들은 15퍼센트가 늘어나 64만 명에 이르렀고 실업자와의 격차를 계속 줄이고 있음. 통계적으로는 실업자와 취업준비자의 구분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실업회피성 취업준비가 들어가는 현실 속에서 둘 사이의 차이는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음.

3. 고용대책 접근 방법 전환 필요

■ 시급한 고용활성화 대책

- 최근의 고용지표가 경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고용대책의 시급성을 말해 주고 있음. 일반적으로 고용지표는 경기에 후행한다고 믿어져 왔음. 예컨대, 기업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인력 조정에 나서지 않다가 경기가 좋아진(혹은 반대로 나빠진) 것을 실감한 이후에 채용을 늘리는(혹은 줄이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생산량과 투자를 늘린 이후에 고용을 늘린다는 설명도 가능함)
- 그런데 올해의 경제상황은 결코 경기에 후행한다고 볼 수 없음. 지난 해 말까지 수출과 내수(가계 소비와 설비 투자 등) 지표가 양호했으며, 이로 인해 올 상반기까지 고용사정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국책, 민간연구소들의 시각이었음. 그러나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기 5개월 전인 지난 6월부터 신규고용은 감소하기 시작했음.
- 아직까지 외환위기 때와 같이 경기선행지수와 고용규모가 전년에 비해 하락하는 수준, 즉, 마이너스 성장에까지 이르지 않는 않았으나, 고용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락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임.

[그림 3] 경기보다 선행해서 하락하고 있는 고용지표



주: 원계열, 전년동월대비

출처: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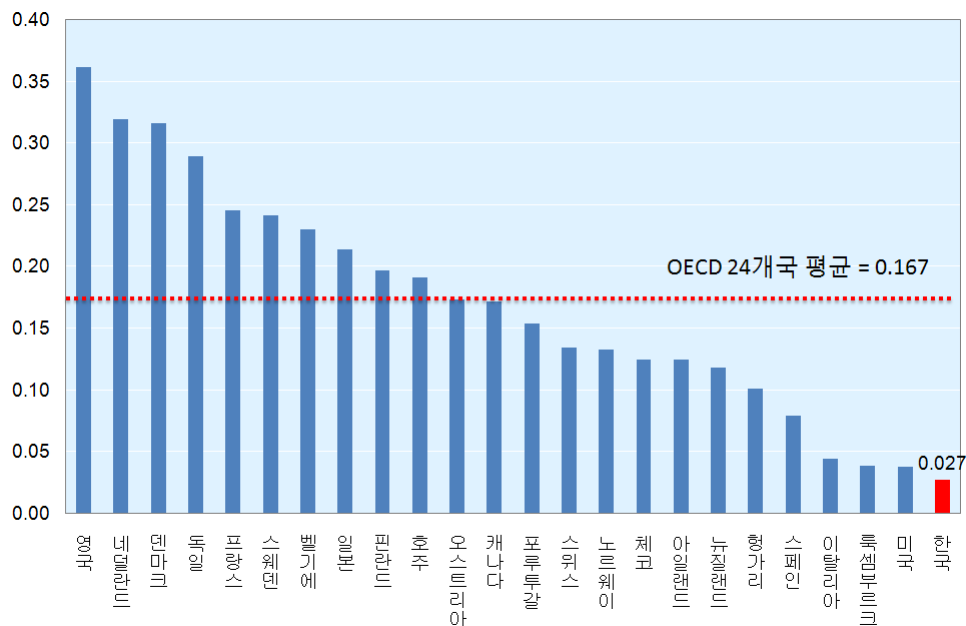
■ 구조적 개선에 초점을 둔 고용대책 필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고용사정은 단순히 ‘GDP 성장’만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음. 물론 GDP 성장이 고용의 총규모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고용탄력성이 하락하는 구조적 요인을 해결할 수는 없음.
- 핵심은 ‘어떤 성장’이냐에 있음. 고용탄력성을 하락시킨 주요 요인으로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고용효과가 낮은 ‘수출중심의 경제구조’, △생산성 개선 없는 ‘경제의 서비스화’, △안정화 대책없는 ‘무리한 고용 유연화’를 들 수 있고, 산업 혹은 기업 차원에서는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 △대기업의 ‘중소기업으로의 비용 전가’ 등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음. 이런 요인들은 세계화를 이데올로기로 내세운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점점 가속화되고, 고용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과잉과 맞물려 고용의 질적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주의할 점은 올해의 고용사정 악화를 일각에서의 주장처럼 단순히 외부

충격이 준 단기적 효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임. 물론 수입물가 상승, 미국발 경기 침체가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며, 여기에 대비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함. 그러나, 구조적 개선없는 경제대책은 결국 고용에는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음.

- ‘성장 주도’에서 벗어나 ‘고용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현재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PES) 지출은 GDP 대비 0.03퍼센트에 불과해 OECD 24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음. OECD 평균의 15퍼센트 수준에 지나지 않아 ‘고용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미국에서 수입된 신자유주의는 ‘성장 주도’를 넘어 ‘시장 만능’을 확산시켜 ‘고용 투자’가 설 땅을 빼앗고 있음.

[그림 4] GDP 대비 공공고용지원서비스(PES) 지출 비율 (2004년)



출처: OECD, 2007, "Employment Outlook 2007"에서 필자가 재구성